

특집
논문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김정인 _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외삽론을 해방 직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이식되었다고 보는 민주주의 이식론과 19세기에 민주주의가 사상과 정체(政體)로서 수용되었다고 보는 민주주의 수용론으로 나누어 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외적 계기에 의해 이식된 선진적인 제도와 이념이라는 민주주의 외삽론은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시각에 근거해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외삽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만민평등의 문화, 저항운동의 문화, 집단민주주의 문화라는 민주주의 문화 형성기의 특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만민평등, 저항운동, 집단민주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을 형성하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1919년의 3.1운동과 민주공화정 선포가 일회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100여 년의 민주주의 문화의 축적 위에 가능했음을 되짚고자 한다.

■ **주요어:** 민주주의 외삽론, 민주주의 문화, 만민평등, 저항운동, 집단민주주의

DOI: <http://dx.doi.org/10.31008/MV.39.1>

1. 들어가며: 한국 민주주의 기원을 보는 시각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는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에 대한 물음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대신에 이런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해왔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는 서구라는 타자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된 이념이자 제도다. 한국은 서구제 민주주의의 수입국이다. 그래서 주로 민주주의의 자생적 기원이 아니라 수입 경로와 그것의 정착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기성품을 어디서 수입해 어떻게 유통시켰는가?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을 바라보는 주류적 관점이었다.

특히, 해방 직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이 이식되었다는 민주주의 외삽론이 부상한 이유는 식민 권력이 전제적인 군사독재를 실시했던 일제시기를 민주주의가 부재한 시기로 보기 때문이었다. 이 시각에는 논리적 함정이 존재한다. 해방 이후 독재 권력에 맞섰던 민주화운동을 상기한다면, 단지 지배 권력이 외세라는 점만 다를 뿐인데 일제시기에 민주주의가 부재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독립운동가인 김산은 일제시기 모든 조선인이 독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망했다고 회고했다.

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

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유. 자유라는 말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테는 금덩이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자유든 조선인들에
 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자
 유, 결혼과 연애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를 원했다. 무정부주의가 그토록 호소력을 가
 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충동은 조
 선에서는 그야말로 강렬한 것이었다. (중략) 우리들 사이에는 민주주의
 가 남아돌 정도로 많았다(님 웨일즈·김산 2005, 190).

김산이 말하는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는 곧 독립을 의미한다.
 그런데, ‘결혼과 연애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
 한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는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마
 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의 눈높이에서 자유를 요구
 한다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삶의 가치로서 내재화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리구조의 형성에는 분명 기점과 과정
 의 역사가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문화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사적 잣대로 민주주의 문화의 보편적 기원에 해당하는 신분 해
 방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분 해방을 통해 자유와 평
 등을 획득한 이래 어떤 경로를 거쳐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그 시대적 특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한국에서 민주

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나아가 신념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은 곧 민주주의 문화가 저항 문화로서 자리 잡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제군주제가 엄존한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에 민주주의는 반봉건적 저항 문화로 자리를 잡아갔다. 일제시기에는 식민 독재 권력에 맞서는 반외세적 저항 문화로서 조선인의 신념 체계 안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체제 안이 아니라 밖에 존재하는 대안적 저항 문화였다. 또한 이러한 저항 문화로서 자리 잡은 민주주의는 집단, 특히 민족을 주체로 한 집단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앞서 김산의 개인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독립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외삽론을 해방 직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이식되었다고 보는 민주주의 이식론과 19세기에 민주주의가 사상과 정체(政體)로서 수용되었다고 보는 민주주의 수용론으로 나누어 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 외삽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만민평등의 문화, 저항운동의 문화, 집단민주주의 문화라는 민주주의 문화 형성기의 특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민주주의 외삽론의 두 양상

1) 민주주의 이식론: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식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의 어떤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냐를 따져야 한다. 그것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원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미군정기에 주목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미군정을 통해 외부로부터”(최장집 1996, 18) 도입된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주도했던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적 세트로서 도입되었다. 즉 민주주의는 분단국가의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토착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제도적 형식만 들여온 필연적 결과, 그 내용을 채울 역사적·정신적·이념적 면을 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국민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가치와 신념을 결여한 채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끊임없는 제도적 불안정과 실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최장집 2002, 71-72).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장집은 한국에서는 해방 이전에 민주주의의 토착적 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그 이전에 어떤 근대적인 민주주의적 경쟁의 규칙이나 제도를 실천해본 경험도 없었다. 전통왕조인 조선조로부터 곧바로 일본식 민통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본식민통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남겨놓은 것은 군국주의적 권위주의 제도와 문화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자본주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필요조건이다(최장집 1996, 20).

그래서 해방 직후 제도적 형식으로서 민주주의가 수용되었을 뿐 역사적·정신적·이념적인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해방 직후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들어온 민주주의를 ‘조숙한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조숙’의 의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최초의 도입이 국내 정치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제도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선거권이다. 그것은 1948년의 5.10선거를 통해 일시에 부여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한 민주주의적 개혁에 힘입어 보통교육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보통선거권이 한국에 있어 최초의 근대적인 선거인 1948년 5·10선거에서 일거에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중략)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투표권의 점진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권자격제한체제’를 거치지

않고 최초의 선거에서 곧바로 전면적 보통선거권을 실시한 경우이다
(최장집 1996, 20).

보통선거권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조속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인 제헌헌법의 제정이었다. 최장집은 제헌헌법에 대해 “우리 헌법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내용을 빌려 왔다. 헌법이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한국사회와 유리되었다”(최장집 2002, 74)고 평가했다.

이러한 최장집의 민주주의 이식론은 이후 민주주의 흐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조속한 민주주의’가 발전 템포 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것이 민주주의 이상과 규범·제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정치적 규범이자 가치로서 뿌리내리면서 1960년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최장집 1996, 23).

이처럼 최장집은 ‘조속한 민주주의’라는 정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외삽론을 주장했다. 정해구 역시 한국 민주주의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비로소 출범했다고 보았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이 위로부터 한꺼번에 주어졌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했다’는 것이다(정해구 2010).

민주주의 외삽론을 주장한 최장집의 견해에서 눈여겨 볼 것은 한

국의 민주화는 제도 정치권 밖에서 운동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4.19가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원형’이라고 주장한 점이다(최장집 2013b). 즉 한국의 민주화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최장집 2013a). 그렇다면, 전제 권력이 존재하던 조선·대한제국기에도, 식민통치권력이 존재하던 일제 시기에도 민주주의가 제도권 밖 운동 영역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의 논리대로라면 해방 이전에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검증되어야 할 주장인 것이다.

한편, 김영명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이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장집과 달리 19세기 말부터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가들의 능력 부족과 한국인의 자질 부족으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이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독립협회 등을 통한 개화파 운동에서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구상은 결코 충분한 민주적 정치 체제를 대상으로 했다고 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이를 실현할 능력은 없었다. 당시 조선의 민족지도자들은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채택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강요한 것과 같은 정도의 시민민주주의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3·1운동 이후 재미독립운동가들은 앞으로 조국에 탄생할 새 정부가 미국의 정체를

모방한 대통령제 민주공화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인의 교육, 경제 등 수준이 당장에 완벽한 민주주의적 자치를 실현시키기에 미흡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건국 후 10년간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민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김영명 2013, 62).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익 지도자들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좌익 지도자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가운데 결국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선도한 측은 역시 당시 최고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남한에 대한 민주주의 이식이 토지개혁, 과도입법의원 창설, 보통선거제 도입, 법과 제도 개혁, 자유민주주의 이념 홍보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김영명은 특히 “선진적인 보통선거제의 도입은 신생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김영명 2013, 67) 있다고 짚으면서 선거와 절차에 중점을 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한국 민주주의의 첫 출발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박찬표는 최장집이나 김영명과 같이 해방 직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에서 미국의 역할을 중시했다. 해방 3년기를 ‘미국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현재의 남한 정치 질서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박찬표 2010, 9)로 보았다.

미국은 외적 정통성은 유엔 개입을 통해, 내적 정통성은 단선예의 광범위한 국민 동원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미국은 반공 체제 구축과 동시에 점령의 최종 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질서를 부과했다(박찬표 2007, 423-424).

하지만 그들과 달리 19세기 독립협회나 1919년에 탄생한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남한 국가의 내생적 기원을 찾았다.

독립협회나 상해 임시정부(임정) 또는 국내외 우파 민족주의 세력 등의 건국 구상을 보면 구한말 국권회복운동이나 일제하 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우파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근대적 입헌주의나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이 수용되고 독립국가의 미래상으로 정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양대 축으로 하는 남한 국가의 내생적 기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찬표 2007, 22-23).

이처럼 해방 직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이 이식되었다는 민주주의 외삽론의 경우에도 해방 이전에 민주주의 토대가 없었다는 입장, 민주주의를 알고 이상화했으나 능력과 자질 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했다는 입장,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내생적 기원으로 파악하는 입장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2) 민주주의 수용론: 19세기의 민주주의 사상과 정체(政體)의 수용

민주주의 외삽론에는 해방 이후 민주주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고 보는 민주주의 이식론과 함께 19세기사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당시 서구 민주주의가 수용되었다고 파악하는 민주주의 수용론이 존재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논하면서 한국사회가 서구의 민주주의와 최초로 만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사회에서 초기에 서구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이념을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 수용이라는 행위에 선행했던 것이 그것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해하고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윤순갑 2008, 300-301).

이와 같은 윤순갑의 주장은 민주주의=서구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조선에 소개한 사람은 최한기였다. 그는 1857년에 편집한 『지구전요』에서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윤순갑 2008, 301). 강정인은 최한기를 조선에서 민주주의 관념을 이해하고 이를 소개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했다. 최한기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를 긍정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인민주권, 정치적 평등, 선거와 의회제도, 다수결, 언론과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조선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조선인이 아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강정인 2002, 23).

그 다음으로 1880년대에는 개화정책을 추진한 개화파가 민주주의를 탐색했다. 그들은 1883년에 창간된 정부 기관지인 『한성순보』를 통해 인민주권의 원리, 입헌정체, 권력분립의 원칙, 의회제도, 선거제도 등을 살폈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 수용 불가였다. 각국의 정치는 토속과 인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선에서는 전제군주제를 바꿀 수 없으며 인민주권 역시 인민의 무지로 인해 수용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개화파의 일원인 박영효는 1888년에 고종에게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군권을 제한하고 민권을 신장하는 방향의 전제군주제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천부인권설, 주권재민의 원칙, 인민의 저항권 등을 소개하며 민권신장론을 펼쳤다. 윤순갑은 이를 민주주의 수용론이라 정의하고 “일본을 통해 전달받았던 서구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윤순갑 2008, 318)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영효 역시 민권 신장을 주장하면서도 인민의 정치 참여는 유보했다. 반면 박영효가 「건백서」를 작성할 무렵에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은 직접적으로 군민공치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입헌군주제가 인민의 권리와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윤병희 1998, 98). 또한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민 훈련의 단계로 지방자치제를 제안했다(윤병희 1998, 101-105).

한편, 안외순은 개화파의 민주주의 수용론을 유가와 민주주의의 융합을 시도한 한국 최초의 지적 실험으로 평가했다. 즉 당시 민주주의 수용론자들은 민주주의의 민치(民治) 관념을 수용하면서 위민(爲民)과 민본(民本)이 체(體)라면 민치는 이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용(用)으로 이해했다. 자유와 법치 관념은 도덕·윤리 및 덕치 관념을 동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수용하고자 했다. 새로운 정치 주체로는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정치에 필요한 정치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가적 군자 시민을 설정했다(안외순 2002).

강정인은 이처럼 개화파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했으나 결국 국망의 위기로 인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으나, 독립운동가들 역시 정체로서의 민주주의를 신봉했다고 보았다.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서구 문명과 일본의 개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독립협회를 비롯한 조선의 개화사상가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했다. 그러나 여러 급진적 개혁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로 조선의 사활 자체가 직접 문제시됨에 따라 민주주의 이념이 조선의 지적, 정치적 풍토에 깊이 뿌리내릴 수는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 하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후에 수립될 정치 체제로 민주주의를 신봉했다. 특히 조선 왕조가 자체적으로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변변한 저항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무력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먹이가 됨에 따라 군주 체제는 심지어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정통성을 상실했다(강정인 2002, 24).

나아가 강정인은 19세기부터 민주주의가 수용되었으나, 결국 민주주의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해방 후 미군정과 보수 세력에 의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권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혁명적인 혹은 획기적인 사건이나, “전근대적인 사회정치적 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입”(강정인 2002, 46)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19세기에 민주주의를 수용했다는 민주주의 수용론 역시 이후 일제 시기까지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해방 이후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이식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익은 민주주의와 유교의 원리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상익 2006, 161)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의 지도하에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서구 민주주의의 이식 과정”(이상익 2006, 133)이라고 이해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 외삽론의 요체는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이 해방 직후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데 있다. 19세기에 민주주의가 대안적인 사상이나 정체로 수용되었다는 민주주의 수용론 역시 민주주의가 수용되었으나 정착하지 못했고 결국은 해방 이후 실현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실현되어야만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다는 프레임은 민족이라는 주체나 운동이라는 영역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를 국가라는 틀을 전제로 바라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된다.

3. 문화적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기원론

민주주의가 외적 계기에 의해 이식된 선진적인 제도와 이념이라는 민주주의 외삽론은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시각에 근거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수용-좌절-이식이라는 단절적인 역사 인식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인민, 시민, 국민, 민족 등에 대한 인식이 누락되어 있다. 선각자에 의한 수용과 좌절, 그리고 타자에 의한 이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장에서는 ‘가치·신념과 행동 간을 매개하는 그물망, 즉 문화’(로버트 워브 1999, 28)의 관점에서 19세기 이래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뿌리를 형성해 갔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공노비가 해방된 1801년부터 반외세 저항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탄생하면서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던 1919년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에 자유, 평등, 자주, 독립 등의 수평적 질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충, 효 등의 수직적인 유교적 질서 규범을 넘어 개인, 집단 혹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문화로서 자리잡아갔던 궤적을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만민평등, 저항운동, 집단민주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을 형성하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1919년의 3·1운동과 민주공화정 선포가 일회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100여년의 민주주의 문화의 축적 위에 가능했음

을 되짚고자 한다. 1922년에 발간된 『현대신어석의』에 등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상기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극도로 존중하여 인민 전체가 국가의 주권을 장악하여 국가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주의(한림과학원 2010, 40).

1) 만민 평등 문화로서의 민주주의 기원론

조선 말기에 들어 신분제가 해체되고 유교 문화가 쇠퇴하는 가운데 만민평등 의식이 확산되어갔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신념과 행동의 기준이 수직적 위계질서에서 수평적인 평등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1801년 공노비 해방이라는 제도적 신분 해방이 보여주듯이, 유교 질서 아래서 배제된 신분인 천민과 배제된 성(性)인 여성이 인민에 포용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천민의 인민화 과정에서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상하귀천의 차별이 없는 동학농민군 안에는 노비 출신 지휘관들이 있었고 노비와 백정 출신 병사들도 적지 않았다. 남계천은 노비 출신으로서 대접주로 활약했다.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에는 백정들로 구성된 주력부대가 있었다. 이들은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에 설치한 집강소에서 신분제 폐지에 앞장섰다(신용하 2001, 126-128, 131-132). 1894년 봄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하

며 요구한 천민 신분 철폐는 그 해 여름에 단행된 갑오개혁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하는 갑오개혁 정부는 개혁 추진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립한 뒤 사흘 만에 천민 신분 해방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천민의 제도적 인민화에 이어 문화적인 인민화의 노력이 이어졌다. 1896년에 탄생한 독립협회는 노비제 잔재 청산에 나섰고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다. 독립협회의 노력은 혁명적이었다. 1898년 10월 28일부터 독립협회가 주최한 관민공동회가 열렸다. 이틀째 관민공동회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관리들이 인민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런데 의정부대신 박정양이 보고한 다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회원 대표로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단상에 올라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로 시작되는 연설을 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의정부 대신에 이어 천민 출신이 연설하는 장면은 그 자리에 모인 인민에게 신분 해방, 만민평등 시대의 도래를 체감하게 했을 것이다.

여성의 인민화는 서학과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으로부터 발원했다. 서학과 동학의 평등한 예배의식과 의례가 여성을 집 밖의 종교 자치 공동체로 이끌어 냈다. 19세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파장이 컸던 여성 문제는 과부의 재혼 허용 여부였다. 천주교구장이던 베르뇌 주교는 1856년에 과부라도 스스로 원한다면 관습에 구애받지 말고 재혼하라고 권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폐정개혁안에서 과부의 재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갑오개혁 정부는 이에 화답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다. 1898년 9월에는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여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여학교 실시(設始) 통문」을 발표했다(독립신문 1896/09/09). 통문은 남녀동권과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이는 여성도 인민의 일원임을 선언하며 여성의 권리 보장을 주장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은 여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여학교설시찬양회를 조직했다. 여성이 주도한 최초의 자발적 결사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해 10월에는 궁궐 앞에 100여 명의 찬양회 회원이 모여 관립여학교를 세워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여성 최초의 정치적 집단행동이었다. 찬양회는 관립 여학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순성여학교를 열었다. 찬양회는 독립협회 활동과 만민공동회에도 참가하는 등 정치 개혁 운동에 가담했다. 독자적인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정치 참여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 활동과 함께 여성 교육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인민화는 남녀평등을 통해 참정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일정한 나이의 인민이면 누구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리를 참정권이라 한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하 임시헌장) 제3조에 평등권을, 제5조에 참정권을 명시했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국회도서관 1973, 3쪽).

남녀가 평등한 인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임시헌장에 이어 4월 25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에서는 중등 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당시 보통선거권이 제도화된 국가는 많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만세시위에 나선 1919년 3월 1일, 일본 도쿄에서는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며 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마쓰오 다카요시 2010, 126). 일본에서는 남성이 1925년에, 여성이 1945년에 선거권을 획득했다. 중국 헌법에 남녀평등 조항이 삽입되고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1921년이였다(김정인 2013, 228).

조선 말기 이래 유교적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만민평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천민과 여성의 인민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19년에 임시정부가 반포한 임시헌장 제3조에 귀천과 남녀를 불문하고 인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제 누구나 식민지 노예 상태에 있는 민족으로서 만민평등이 실현되는 독립과 해방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2) 저항 운동 문화로서의 민주주의 기원론

일제 시기에는 독립운동과 같은 반외세 저항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세상을 꿈꿨다면, 19세기에는 인민의 반봉건 저항운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서양의 격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에는 인민의 반봉건·반외세 저항운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1894년에는 반봉건·반외세의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19세기 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반봉건 민주주의운동을 펼쳤다. 1919년에는 반외세 민주주의운동인 3·1운동이 발발했다. 이렇게 권력과 외세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갔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은 종래의 농민항쟁과 마찬가지로 농촌을 기반으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일으켰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주장은 종전과 다른 변화를 보였다. 집강소와 도소, 그리고 폐정개혁안이 그것이다. 전봉준은 1894년 5월 전라부사 김학진과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전라도 일대에 치안 유지 기능을 맡는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는 인민 자치의 구현체로서 의결 기관을 두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김경순 1997). 동학에는 또 하나의 자치공동체인 도소가 있었다. 집강소는 권력과 동학을 잇는 자리에 위치한 준행정기구였지만, 도소는 여전히 권력의 밖에 존재하는 동학의 자치기구였다. 탐관오리를 쫓아내고 횡포한 부호를 응징하고 온갖 잡세와 빚을 없애고 인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해결하는 일은 집강소가 아니라 도소를

통해 이루어졌다(조정달 2008, 205-216).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개혁 방안은 폐정개혁안으로 집약되었다. 오지영이 동학농민군이 내놓은 개혁안들을 집적해 하나의 완성된 강령으로 제시한 ‘폐정개혁안 12개조’에는 노비제와 천민 차별의 철폐, 청춘과부의 재혼 허용, 지역과 문벌을 타파한 인재 등용 등의 사회 정의에 관한 요구가 들어 있다. 즉, 신분제적 질서를 없애 인민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탐관오리, 불량한 유림과 양반, 횡포한 부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벌을 요구했다. 권력과 신분과 재산을 발판으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던 지배 권력을 해체하고 인민 주권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 관계의 평등적 재편을 요구하는 ‘토지의 평균 분작’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폐정 개혁의 의미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이 남긴 법정 진술에 응축되어 있다.

동학은 과거 잘못된 세상을 고쳐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나선 것이다. 인민에 해독을 끼치는 탐관오리를 베고 일반 인민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복을 채우고 음탕하고 사된 일에 소비하는 국세와 공금을 거두어 의거에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고 여러 사람의 피땀을 굶어 제 몸을 살찌우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나?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고 귀천이 있게 하고 공적 토지를 사사로운

토지로 만들어 빈부가 있게 하는 것은 인도상 원리에 위반이다. 이것을 고치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며, 악한 정부를 고쳐 선한 정부를 만들 고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냐?(이이화 2006, 225)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개혁 요구는 갑오개혁이라는 정치 개혁으로 이어졌다. 갑오개혁 정부는 아래로부터 요구받았던 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제군주정을 그대로 둔 채, 군민공치(君民共治)를 내세우며 왕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는 개혁을 시도했다(왕현종 2003, 435). 일본의 궁내부 제도를 참조하여 왕실과 정부를 명확히 분별하고자 했다. 의정부와 대신만이 정책을 발의하도록 했고, 그 정책들은 의정부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실제 갑오개혁 정부는 의정부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의정부회의를 '의회'라 약칭하기도 했다. 이어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 메이지헌법의 규정을 참조한 '내각관제'를 반포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내각이 의회가 입법한 법률에 의거하여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 갑오개혁 정부는 의회가 없는 조선을 관료 중심의 내각회의를 통해 꾸려가고자 했다. 내각회의가 법률 제정 및 세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을 비롯하여 모든 국정 사무를 도맡도록 했다. 설령 왕이 직접 이행을 명령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반드시 내각회의에 올려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정용화 2004, 296-301). 이처럼 갑오개혁을 통해 군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지켜 본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고종을 '월급 받는 자동인형'이라 불렀다(비숍 1994, 261).

하지만 1897년에 수립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치 반동에 대한 인민의 비판과 저항을 대변한 것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였다. 1896년 4월 7일에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독립신문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하고자 한글 전용으로 발간되었다. 독립신문은 논설과 기사 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 인간형, 서로 신뢰하고 정직하게 대하며 차별하지 않는 민주적 관계,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규칙에 따르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민주적 제도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 중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를 강조한 논설을 사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이라는 것은 상하·귀천·빈부·유무세를 상관치 아니하고 ‘공평’, 이 글자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까닭에 사람이 가난하고 세가 없고 지위가 낮더라도 법만 범하지 않고 옳은 일만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고 남에게 압제받을 까닭도 없다(독립신문 1896/07/14).

설령 사람이 죄가 있는 줄을 재판하기 전에 알더라도, 재판관이 살펴 죄가 있다고 신고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독립신문 1896/09/29).

1896년에 발족한 독립협회는 자발적 결사체의 효시였다. 토론회나 만민공동회 같은 집회를 통해 공론을 모으고 정부에 개혁을 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였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해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독립협회는 안건마다 회원의 직접 선거로 총대위원을 뽑아 검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898년에 독립협회는 그 위상을 놓고 고종과 논쟁을 벌였다. 먼저, 고종이 “독립협회의 토론은 정치문제 이외의 것에 한정하도록 하고, 독립관에서 하는 집회만 허가할 것이니 독립관을 떠나 집회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조서를 보내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국회는 국가가 세우는 공립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의결하는 곳이고, 협회는 국민이 세운 사립으로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세운 협회가 개명진보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를 평론하고 정부 관리의 진퇴를 논하는 것은 원래 협회의 규칙이 아닌데, 정해진 장소를 떠나 집회를 열고 상소를 바치면서 대궐 문을 막고 정부 관리를 협박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회에도 이런 권리가 없는데 협회에 있을 수 없으니, 오늘 이후에는 각 관청에 명령하여 어느 협회를 불문하고 무리를 지어 치안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 정해진 장소에서 토론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것이니, 인민의 지식 발달에 힘쓰도록 하라(독립신문 1898/10/22).

자발적 결사체인 독립협회의 역할을 인민 계몽에 국한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소로 고종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 정치 문제 토론은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관료로 하여금 황제와 국가를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공론의 자유로운 표현에 있다. 외국의 예에도 민회는 행정을 잘 못하면 전국에 알려져 민중을 모아 질문하고 논핵해서 인민이 승복하는 바가 아니면 감히 물러가지 아니하는 곳이지 토론만 하는 곳은 아니다. 독립협회는 독립을 기초로 하고 충군애국을 목적으로 하여 공적으로 세워진 회다. 법을 문란하게 만드는 신하가 있으면 탄핵하고 성토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거늘, 민권이 강해지면 군주권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다. 오늘날 민의가 없으면 정치와 법률이 무너져 어떠한 재앙이 어느 땅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우리 집회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서울과 시골에서 뜻 인민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모인 것이다(황성신문 1898/10/25).

독립협회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고종의 조서를 읽고도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집회를 연 것은 고종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무청으로 물러가 처벌을 요구했다. 경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잡아라’며 4일간 철야 시위를 벌였다. 결국 고종이 ‘특정한 거짓과 악을 교정하려 할 때 자기의 의견 표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하의 의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물러섰다. 독립협회는 이를 “대한 전국 2

천만 동포를 대표한 우리 독립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인민과 나라에 관계되는 일과 무릇 정부나 내외 관리들의 혹 정치 잘못하는 것이나 장정과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보고 듣고 아는 대로 평론하여 교정하라 하신 말씀”이라 해석했다(독립신문 1898/10/27). 이를 지켜본 외국 공사들은 본국에 독립협회가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다고 보고했다(신용하 2001, 418). 고종 황제와 자발적 결사체인 독립협회가 갑론을박하는 초유의 경험은, 인민에게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어 공론을 형성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시대가 왔음을 깨닫게 했다.

독립협회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특히 의회 개설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일본에서 일어난 자유민권운동과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898년에 들어와서는 청에서 입헌군주제 운동이 전개되는 걸 지켜보며 의회개설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독립협회는 자문기구인 중추원을 상원으로 개편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독립협회는 고종이 의회 개설 상소를 수용하지 않자, 집회와 시위에 나섰다. 10월 1일부터 12일 동안 고종이 거처하는 경운궁 앞에서 밤낮으로 시위했다. 마침내 독립협회는 10월 14일에 정부와 의회 설립에 합의했다. 열흘 후에는 독립협회가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추원관제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의회 성격을 지닌 중추원에는 법률안과 칙령안은 물론, 의정부가 제출한 안건과 중추원의 건의안, 인민의 공론을 수용한 안 등을 심사하고 의논하여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한국 최초의 의회 개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외교가에서도 관심을 보였

다. 미국 공사는 한국인이 선거로 입법부를 수립하는 방향, 즉 입헌군주제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독립협회는 정부로부터 의회 개설을 약속받자, 이를 인증한다는 의미에서 관료와 인민이 함께 참석하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는 이 자리에 모인 인민에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연설을 금지하도록 조치해 관민공동회 개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신용하 2001, 436).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정부 관료와 인민이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공론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관민공동회에서는 의회의 조약 비준권, 재정 일원화, 예결산제도 확립, 공개재판제도와 증거주의, 법률 준수 등 민주주의 정치로의 진전을 담은 「헌의 6조」가 발표되었다. 「헌의 6조」는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민과 함께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군민공치의 입헌군주제적 지향을 담고 있었다(서희경 2012, 44).

하지만 늘 혁명에는 반동의 공세가 따르듯이 의회개설운동에도 반동의 폭풍이 몰아쳤다. 11월 4일에 정부는 독립협회가 제출한 안을 기본으로 하는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했다. 독립협회는 즉시 다음날 오전에 중추원 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반동의 공세는 그 사이, 정확히는 11월 4일 밤에 시작되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익명서가 나붙었다. 독립협회는 군주제를 폐하고 공화제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에 박정양, 부통령에 윤치호, 내무대신에 이상재, 외무대신에 정교 등이 내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익명서였다. 고종은 11월 5일 새벽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체포하고 독립협회에 해산을 명령했다.

서울 시민들은 바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강력히 항의했다. 만민공동회가 11월 5일부터 시작한 독립협회 지도자 석방운동은 6일 만에 성공했다. 하지만 만민공동회는 익명서를 뿌린 인사들을 처벌하고 독립협회 설립 허가가 다시 날 때까지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보수 세력은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할 요량으로 황국협회에서 활동하는 보부상을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분노한 인민들이 보부상들을 몰아냈고 만민공동회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결국 인민을 달래기 위해 황제가 직접 나섰다. 11월 26일 고종은 경운궁 문 밖 천막에서 만민공동회 대표를 직접 만나 그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승낙했다. 이 역사적 장면을 보기 위해 많은 인민이 몰려들었다. 고종은 칙어를 내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나라와 인민이 서로 소통하는 길을 열 것을 약속했다. 이 칙어는 한글로 번역되어 신문을 통해 전국에 퍼져갔다. 인민 누구나가 황제가 한 약속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정선태 2007, 103-104).

하지만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민들은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정치 개혁을 압박했다. 당시 서울 인구가 17만 명 정도였는데 만민공동회에는 매일 1~2만 명이 모였다. 학생, 상인, 여성을 비롯한 서울 시민이 연일 철야농성을 펼쳤다. 이 소식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민공동회에 지지를 표하며 성금을 보내왔다. 집 관 돈 일부를 보낸 이, 배를 보낸 과일 장수, 술을 보낸 술장수로부터 감옥

의 죄수는 물론 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성금이나 물품을 쾌척했다. 나무꾼들이 기부한 장작은 철야농성장의 밤하늘을 흰히 비쳤다. 만민공동회를 엄호하던 200여 명의 군인이 지지를 표명하며 자진 해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김정인 2015, 261-263). 이처럼 만민공동회는 만민이 공동으로 모여 국정을 토론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

평범한 인물이 만민공동회의 상징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덕구 사회장이 있었다. 구두 수선공이던 김덕구는 11월 21일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황국협회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 만민공동회는 그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애국과 충의를 실천하고 순국한 의사(義士)라고 추앙하며 12월 1일에 사회장을 추진했다. 장례식 당일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김덕구의 운구 행렬이 종로를 거쳐 남대문에 도착했다. 상여 뒤로는 수많은 만장과 수천 명의 인민이 따랐다. 많은 사람이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노제가 시작되었다. 학생 대표, 여성 대표, 교사 대표가 제문을 읽고 학생들이 추모가를 합창했다(정선태 2007, 111). 겨울의 초입에서 찬비와 추위를 무릅쓰고 철야농성을 불사하던 만민공동회는 결국 군대를 동원한 정부의 진압으로 해산되었다(김정인 2015, 263).

이처럼, 만민공동회는 농촌을 기반으로 농민들이 운집했던 종래의 시위나 집회와 달리,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이 주도한 시위이자 집회였다. 또한 정부 관리가 배석한 관민공동회는 인민들이 안전을 결의하여 관리들의 서명을 받은 후 황제에게 재가를 요청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만민공동회를 처음 개최한 것은 독립협회였다. 그러나 만민공동회가 연일 만여 명을 헤아리는 인민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의 장이 된 것은 독립협회가 폐쇄되고 간부들이 죄다 체포되었을 때였다. 또렷한 지도부와 운영 방침 없이 자발적인 인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꾸려간 집회이자 시위가 바로 만민공동회였던 것이다. 또한 만민공동회는 비폭력 시위이자 집회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해방 직후에 유자후가 저술한 『조선민주사상사』에 따르면, 만민공동회는 “근세에 와서 가장 큰 민회로서 비록 그 활동한 기간은 짧았었고 마침내 해산을 보았었으나 근대의 민권신장과 언론자유인 민주주의의 사상을 뿌리 깊게 심어 놓고”(유자후 1949, 142) 갔다.

이처럼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최초의 자발적 결사체인 독립협회가 출현했다. 독립신문은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만민공동회는 비폭력 시위의 장을 열었다. 비록 의회개설운동은 좌절되었지만, 갑오개혁 당시와는 달리 입헌군주제를 공론화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다. 량치차오는 전제군주제를 고집해 망국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은 사실 공정에 있다. 오늘날 세상의 입헌국들에서 군주는 정치적 책임이 없고 약정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한 나라의 정치와 큰 관계가 없다. 전제국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국가의 명운이 전부 공정에 달려 있다(최형욱 2014, 87).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군부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전형적인 군사독재형 통치를 실시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조선인이 민족의 독립, 즉 민족의 자유와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두 달이 넘게 계속된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쟁이었다. 계급과 계층을 망라했고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일어났다. 신분은 물론 빈부·귀천·남녀를 불문하고 인민 모두가 독립을 요구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민들은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거리 시위, 봉화 시위 등을 조직했다.

이처럼 3·1운동은 민족이라는 식민 권력 밖의 공간에서 전개되었으나, 인민이 주권 담지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전면에서 드러내며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인민을 독립의 연대의식으로 묶어준 내적 논리는 ‘구한국 전제와 일본제국 전제 아래서 오래도록 사모해온’ 민주주의였다(신한민보 1919/10/30).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2·8독립선언서」는 일본이 무단전제(武斷專制)의 통치를 실시하며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구속하고 행정·사법·경찰 기구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

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김삼웅 1997, 70).

독립과 자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족 생존의 권리인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미독립선언서」는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과 ‘전 인류의 공존동생권’을 내세우며 민족마다의 자유 발전과 인류로서 차별 없는 대접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3.1운동에서 민족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적 논리는 민주주의였다.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확산되어가던 4월 11일에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공포한 임시헌장에는 이러한 인민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에 등장하는 민주공화제는 신해혁명 이래 중국에서 등장한 많은 헌법안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925년에 만든 ‘중화민국헌법’ 초안에 처음으로 민주공화제가 등장한다. 다만 여기서 공화국은 미국처럼 연방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여치현 2012, 271-272). 1941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이 임시헌장에 대해 “다른 민족(일본)의 전제를 뒤집고 군주정치에 낡은 관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 제도를 건립하여 사회 계급을 소멸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국회도서관 1973, 21). 이렇게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선포하자, 인민은 “미친 듯 취한 듯 기뻐했다”라고 한다(신한민보 1919/10/30).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임시헌장의 요체가 해방 이후 제헌헌법에 반영되면서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민주주의는 반봉건·반외세의 저항 운동의 문화 속에 자리했다. 동학농민전쟁,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3·1운동에서 인민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주의는 반봉건·반외세 저항운동의 내재적 원리·신념 체계로서 뿌리를 내렸다.

3) 집단민주주의 문화로서의 민주주의 기원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민주적인 공동체는 자유로운 개인을 지탱해준다. 이를 인민 자치라 일컫는다. 개인민주주의와 집단민주주의가 인민 자치를 매개로 공존하는 것이다. 개인민주주의 문화 혹은 집단민주주의 문화 중 어떤 전통이 더 강한지는 나라와 사회마다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르다.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인민은 통치와 교화의 대상이었다. 민본주의가 존재했지만, 그것은 인민에게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또한 유교 문화에서 민주주의 문화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집합적 주체인 인민은 개별 주체인 개인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만 했다. 개화와 관료이자 지식인인 유길준은 개인의 자유는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좇아 하도록 하는, 인생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거나 굽힐 수 없는 권리'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포함되었다(유길준 2004, 131, 136, 139-141). 또한 유길준은 자유를 얻은 개인은 사회에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개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공평하고 올바른 권리이므로 똑똑함과 우둔함, 귀함과 천함, 부유함과 가난함, 강함과 약함에 따라 구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유길준 2004, 137). 독립신문에는 종종 미국식의 개인민주주의 문화를 문명적 삶의 모델로 제시하는 논설들이 게재되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이 일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자신이 하는 노동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독립신문 1897/10/09).

이와 같은 개인민주주의는 민권론의 이름으로 국권론과 논쟁을 할 만큼 힘을 얻어갔다. 하지만 국망으로 개인민주주의는 더 이상 설 땅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집합적 주체의 독립의 권리를 내세우는 집단민주주의의 실현이 개인민주주의 신장의 선결 과제로 부상했다. 국권 회복이 곧 민권 확립에 선행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상에 제일 귀중한 것은 독립이 아닌가? 나라에 독립이 있으면 인민의 권리가 있고, 독립이 완전하면 인민의 생애가 완전하지만, 독립이 없으면 인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독립이 완전치 못하면 인민의 생애도 완전치 못하노니… (대한매일신보 1907/10/03).

결국 국망으로 개인은 자유와 권리, 평등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

다. 개인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을 이루어야 했다. 이제 자주와 독립이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려는 집단민주주의의 가치가 되었다.

3·1운동 당시 등장한 독립선언서들은 앞서 「2.8독립선언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민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탄압을 비판했다. 1919년 3월 13일에 만주 지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전제정치를 비판하면서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했다.

아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아 자손과 인민에게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다른 민족의 전제의 가혹한 억압에서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이윤상 2009, 203).

1919년 3월 17일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이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는 일본을 민주주의의 공적이라 비판하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자는 독립투쟁에 나선 ‘우리 편’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 세계적 민주주의의 대이상 의 확립, 정의 및 민족의 자유로운 문명적 발전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는 바이며 세계 민주주의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정대하고 엄숙한 한 마디를 밝혀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일반적 평화를 위하여, 또 인류 최선의 이상을 위하여,

압제자 및 폭학자에 대해 용감히 분투하고자 한다.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자는 다 우리 편이다(이윤상 2009, 195-196).

이처럼, 3·1운동 당시 민족 독립의 정당성은 민주주의로부터 찾았다.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민족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인 2017, 222). 3·1운동 당시 감옥에서 작성한 「조선 독립의 서」에서 한용운은 2천만 명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생의 목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각 설이 분분하여 일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우나 인생 생활의 목적은 참된 자유에 있으니 자유가 없는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쾌락이 있으리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애석히 생각지 아니하나니 못 생명을 견어도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후로 압박에 압박, 일동일정과 한마디 말, 한마디 침묵에까지 압박을 가하여 자유로운 생기란 털끝만큼도 없는 즉, 혈성(血性)이 없는 타력물(外力物)이 아닌 바에야 어찌 이를 참고 받을 것인가. 한 사람이 자유를 잃어도 천지의 화기를 손상시킬 것인데, 어찌 2천만 명의 자유를 말살함이 이와 같을 수가 있으리오. 조선의 독립을 가히 늦추지 못하리라(한용운 1973, 358).

이후에도 식민지 조선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1922년에 출간된 『현대신어석의』의 정의처럼 민족을 전제로 이해되었다.

자유주의: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치상의 주의

평등주의: 협의로는 한 나라의 민족, 광의로는 세계의 민족이 누구를 막론하고 즉 귀천 상하 남녀의 구별 없이 인류가 되어 각각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계급의 차등 없이 모두 동등하다는 주의(한림과학원 2010, 67, 78.)

이처럼 집합적 주체로서의 민족의 독립과 자치를 표방하는 집단민주주의를 집약한 개념이 바로 민족자결주의였다.

세계 속에 존립하는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한 여러 민족은 모두 각각 자유 자결을 행할 권리를 가진 자이므로 강대민족이 단지 약소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속박하는 것은 세계평화상 허용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평화를 위하여 또 각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의 존립은 각자의 자결로 행한다는 주의(한림과학원 2010, 41)

당시에는 민족자결주의를 국제적 데모크라시라 정의하기도 했다(고영환 1920). 조소앙은 1942년에 쓴 「임시정부의 목적과 임무」라는 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민족자결주의의 시선에서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했다.

한국 독립선언에 의하면 ‘한국은 독립국임과 한국민족은 자유인임을 선언하노라’고 선언 벽두에 대문자로 제목을 달았다. 실로 한국민족이 자결권을 실행한 최초의 장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민족 자결 원칙은 세 가지 결정할 권리를 지니는데, 첫째 소속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떠날 수 있는 권리, 둘째 이탈자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나라를 세울 권리, 셋째 이탈자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정치, 외교, 군사 등 건국강령을 세우며 재차 타국에 부속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무릇 이 세 종류의 자유 결정과 자유 행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는 실로 민족자결주의의 본질적인 뜻이다. 선언서 가운데 ‘한국은 독립국’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니 즉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권리며, ‘한국민족은 자유민’이라는 것은 셋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니, 즉 한국의 전체 민중이 자유민족의 자격으로 정치, 군사, 외교 등 국가 건립 공작에 관하여 충실히 집행하고 아울러 건국강령을 자유로이 결정하여 다시 악랄한 타국에 부속 의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실로 민족자결의 대의를 선언한 문서이다(강만길 1982, 170-171).

조소앙에 따르면,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민족자결주의의 요체였다.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가 설 땅을 잃고 말았다. 개인 주체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족 주체의 민주주의를 우선 실현해야 한

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국망으로 인한 식민의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집단민주주의 문화가 강고하게 뿌리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4. 나가면서: 민주주의는 역사적 존재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에 관한 입장은 타자에 의한 외삽론과 인민 주도의 자생론으로 구분될 수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상을 준거로 과거의 원형을 찾아가는 연역적 접근 방식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의 발생과 변화를 추적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그랬듯이 오늘날에 있어 절대적 신념체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판단의 잣대는 민주/반민주이다. 그와 같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에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기원으로서의 신분 해방이 자리한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발원하면서 형성된 만민평등, 저항운동, 집단민주주의를 품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한국에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한 전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는 외삽론은 산업화를 설명하는 방식처럼 민주주의 발전을 ‘급속한 민주화’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논리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4·19에 등장

한 ‘민주주의 사수하자’라는 구호는 해방 이후 급속한 민주주의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19세기 이래 인민 주도의 저항운동 문화로 축적된 민주주의가 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방 직후만 해도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연합성 신민주주의, 조선식 신형민주주의 등 다채로운 민주주의론들이 등장했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 강좌를 열었고 언론은 앞다퉈 민주주의를 다뤘다. 조선과학자동맹은 『민주주의』라는 주간지를 발간했다. 그럼에도 해방 직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는 주장이 여전한 것은 그만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실린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글에 나오는 문구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끝~~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피어나고 발전하는 역사적 존재이다(조선과학자동맹 1947, 17).

참고문헌

- 강만길 편. 1982. 『조소앙』. 서울: 한길사.
- 강정인. 2002.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화.”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 고영환. 1920. “테모크라시의 의의.” 『학지광』 29.
- 국회도서관. 1973.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 서울.
- 김경순. 1997. “1894년 농민집강소의 민주적 성격.” 『사회과학논총』 16(계명대), 195-207.
- 김삼웅 편저. 1997.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서울: 가람기획.
- 김영명. 2013. 『대한민국 정치사-민주주의의 도입, 좌절, 부활』. 서울: 일조각.
- 김정인. 2017.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서울: 책과함께.
- _____. 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서울: 책과함께.
- _____. 2013. “근대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 전통 수립과 특질.” 『역사와 현실』 87, 201-234.
- 마쓰오 다카요시. 2010. “다이쇼 테모크라시와 3·1독립운동.”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 체제』.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7.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비숍, 이사벨라 버드.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서울: 도서출판 살림.
- 서희경,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울: 창비.
- 신용하. 2001.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외순. 2002. “19세기 말 조선의 민주주의 수용론 재검토.”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 여치현. 2012. 『인디언마을공화국』. 서울: 휴머니스트.
- 왕현중.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 웨일즈, 님·김산. 2005. 『아리랑』. 송영인 옮김. 서울: 동녘.
- 위브, 로버트. 1999. 『미국 민주주의의 문화사』. 이영옥·박인찬·유홍립 옮김. 서울: 한울.

- 유길준. 2004.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 서울: 서해문집.
- 유자후. 1949. 『조선민주사상사』. 서울: 조선금융조합.
- 윤병희. 1998. 『유길준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윤순갑. 2008. “한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수용.” 『대한정치학회보』 15-3. 197-320.
- 이상익. 2006. “한국의 정치사상적 전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철학논집』 19. 131-165.
- 이운상. 2009.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이화. 2006. 『녹두장군 전봉준』. 서울: 중심.
- 정선대. 2007. “근대 계몽기 민족·국민 서사의 정치적 시학.” 『근대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서울: 소명출판. 75-100.
- 정용화. 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해구. 2010.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다시 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서울: 선인. 19-52.
- 조경달. 2008. 『이단의 민중반란』. 박맹수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 조선과학자동맹. 1947.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주의』 17.
- 최장집. 2013a.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화.”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169-202.
- _____. 2013b.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65-92.
- _____. 200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최형욱 편역. 2014.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서울: 글항아리.
- 한림과학원 편. 2010. 『한국근대신어사전』. 서울: 선인.
- 한용운. 1973. 『한용운전집』 1. 서울: 신구문화사.

Abstract

Reconstruction of the Origin of Korean Democracy

Kim, Jeongi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wo kinds of arguments. They have both stressed that Democracy was implanted on Korean soil, but they also differed in opinion over how it actually was. One of the two arguments theorized that democratic institutions and ideology of free democracy were planted by the U.S. righ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while the other thought that democracy was introduced to Korea (imported by Koreans) in the 19th century as a philosophy and a form of government as well. Both arguments view democracy as an advanced set of institution and ideology transplanted on a Korean environment in the wake of exterior influences, and they have also been based on a stance determined to seek the origin of democracy in Korea, which has been struggling to establish and fulfill a democratic system.

This article is a critical view of such Implanted democracy argument in general. It also attempts to assume a cultural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subject, trying to find the origin of Korean democracy through examination of several trends such as Equality for all, history of Resistance, and Democracy in Communities, which all began to emerge in the early days of formation of a democratic culture in this country. The general idea is to formulate a hypothesis that Korean democracy originated with these kinds of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ultimately

enabled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declaration of a Democratic Republic in 1919, not as separated out-of-the-blue incidents, but as a culmination of 100 years of cultural efforts aimed toward democracy.

■ **Keyword:** Argument of Implanted Korean Democracy, Democratic Culture, Universal Equality, Resistance Movement, Group Democracy

투고: 2018/10/05 심사: 2018/10/15 확정: 2018/11/13